



**해설** ▶ 설문의 경우 ㉠이 옳은 설명이다.

- ㉠ 포도청은 1894년 갑오개혁 때 경무청관제직장(警務廳官制職掌)이 제정되어 한성부에 “경무청”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.
- ㉡ 198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“경무청관제직장”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“행정경찰장정”이 제정되었다.
- ㉢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‘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’(1908.10.29) - ‘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’(1909.3.15) - ‘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’(1909.7.12) - ‘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’(1910.6.24)의 순서로 진행되었다.
- ㉣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은 내무부 및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서 관청의 지위를 갖지 못하였다. 그러나 유일하게 “경찰서”는 1991년 이전에도 행정관청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, 고려시대의 위아가 현재의 경찰서격이라는 해석 때문이다.

**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**

- ① 경찰행정주체를 위하여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경찰행정관청이라 하며 경찰청장, 경찰서장, 지구대장이 이에 해당한다. (기 p146·149, 객 p216, 토탈 p886)
- ② 경찰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자기의 명의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경찰행정기관을 경찰의결기관이라 하며 경찰위원회,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가 있다. (기 p146, 객 p216, 토탈 p40)
- ③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(기 p154, 객 p219, 토탈 p64)
- ④ 경찰서장은 경무관,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. (기 p149, 객 p222)

**해설** ▶ ① 지구대장·파출소장은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다.

- ②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경찰자문기관에 해당한다.
- ③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은 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(再議)를 요구할 수 있다(경찰법 제9조 제2항).
- ④ 경찰법 제17조 제1항 <개정 2012.2.22>

**4 각 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**

- ㉠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은 시·도지사가 위촉·임명한다. (기 p155, 객 p228, 토탈 p603)
- 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유고 시 상임위원,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,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기 p155, 객 p228, 토탈 p603)
- ㉢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 (기 p153, 객 p228, 토탈 p603)
- ㉣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. (기 p209, 객 p302, 토탈 p851)

※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[www.ppsg.co.kr](http://www.ppsg.co.kr) 에서 제공됩니다.



직무상 의무	경찰공무원 복무규정	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(제8조),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(제9조),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(제10조)
신분상 의무	국가공무원법	비밀엄수의무(제60조), 청렴의무(제61조), 품위유지의무(제63조), 영예 등의 제한(제62조), 정치운동금지(제65조), 집단행위금지(제66조)
	공직자윤리법	재산등록·공개의무(제3조·제10조)

**6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**

-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. (기 p265, 객 p394, 토탈 p92)
-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 (기 p281, 객 p395, 토탈 p726)
- ③ 미아, 병자,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(기 p269, 객 p379, 토탈 p727)
- ④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무기, 수갑, 포승, 경찰봉, 방패 등을 말한다. (기 p278, 객 p388, 토탈 p774)

**해설** ▶ ④ 무기는 경찰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. “경찰장구”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“수갑·포승·경찰봉·방패 등”을 말한다(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2항).

- ① 동법 제2조 제1호
- ② 동법 제12조
- ③ 동법 제4조 제1항

**7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**

-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구성을 각자가 맡은 임무의 기능 및 성질상의 차이로 구분하여 보수를 달리하는 통제체계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. (기 p291, 객 p406, 토탈 p98)
- ②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의 범위는 좁아지는데 반하여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어진다. (기 p291, 객 p407)
- ③ 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,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. (기 p292, 객 p408, 토탈 p924)
- ④ 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는 경우 서로 모순되는 지시가 나오고, 이로 인해 집행하는 사람은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혼선과 그로 인한 비능률을 막기 위해서 명령통일의 원칙이 요구된다. (기 p293, 객 p410, 토탈 p98)

**해설** ▶ 계층제(hierarchy)의 원리란 조직목적 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“책임과 난이도”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,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.

※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[www.ppsg.co.kr](http://www.ppsg.co.kr) 에서 제공됩니다.

**8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**

- ①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일반통치권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. (기 p197, 객 p288)
- ②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,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,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. (기 p197, 객 p288, 토탈 p636)
- ③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.
- ④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(기 p199)

**해설** ▶ ① 징계란 일반통치권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가 아니라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.  
②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징계사유가 아니라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 (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, 제78조).  
③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 
④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, 하급경찰기관으로부터 징계등(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) 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“요구하여야 한다”(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1항).

**9 경찰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기 p320, 객 p445, 토탈 p107)**

- 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㉢ 경찰청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㉣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1개
- ② 2개
- ③ 3개
- ④ 4개

**해설** ▶ 설문의 경우 ㉠㉡㉣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.  
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“당해”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국가재정법 제28조).

※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[www.ppsg.co.kr](http://www.ppsg.co.kr) 에서 제공됩니다.

- ㉠ 기획재정부장관은 “국무회의의 심의”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(동법 제29조 제1항).
- ㉡ 동법 제31조 제1항
- ㉢ “기획재정부장관”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(동법 제32조).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(동법 제33조).

## 10 경찰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국회는 경찰 관련 법률제정, 예산심의, 국정조사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. (기 p348 객 p475, 토탈 p116)
- ② 법원은 법적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통해 경찰활동을 통제하는 바, 법원의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. (기 348, 객 p473, 토탈 p116)
- ③ 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, 사전통제제도에는 청문, 행정상 입법예고,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. (기 p347, 객 p473, 토탈 p116)
- ④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이나 감독권 등의 훈령권을 행사함으로써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등 통제를 가할 수 있다. (기 p348, 객 p239, 토탈 p116)

**해설** ▶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은 사후통제제도에 해당한다.

## 11 서울중앙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甲경사와 乙순경은 112순찰근무 중 관내에서 ‘술에 취한 남편(A)이 집에서 아내(B)를 폭행하고 있다’라는 신고를 접수하였다. 현장에 도착한 甲경사와 乙순경이 취한 다음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기 p540, 객 p668, 토탈 p246 · 728)

- ① 아내(B)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.
- ② 남편(A)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아내(B)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.
- ③ 아내(B)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.
- ④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(A)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였다.

**해설** ▶ ④ 검사가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(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). 한편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,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로 접근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(동법 제8조의2 제1항).

- ① 옳은 설명이다.
- ② 동법 제5조 제1호
- ③ 동법 제5조 제2호



- ④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.

- 해설 ▶** ①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,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,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할 수 있다(대판 2008.2.1, 2006다6713).
- ② 대판 2006.7.6, 2005도6810
- ③ 대판 2004.2.12, 2003도6282
- ④ 대판 2008.7.24, 2008도3211

#### 14 경비경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, 미국의 SWAT, 독일의 GIGN, 프랑스의 GSG-9 등이 있다. (기 p700, 객 p823, 토탈 p325)
- ② 진압활동시의 3대 원칙은 신속한 해산, 주모자 체포, 재집결 방지이다. (기 p676)
- ③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중 ‘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원칙’은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이다. (기 p682, 토탈 p522)
- ④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경찰청이다. (기 p664)

- 해설 ▶** ①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, 미국의 SWAT, “독일의 GSG-9, 프랑스의 GIGN,” 이스라엘의 Sayaret Matka 등이 있다.
- ③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은 목표(적)물 보존의 원칙이다.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유일한 통로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, 여러 개의 통로와 출입문은 오히려 적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 취약성을 증가시켜 주는 결과가 되고 하나의 통제된 출입문이나 통로를 통한 접근도 반드시 경호원에 의하여 확인된 후 허가절차를 밟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.
- ④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소방방재청이며, 경찰은 현장통제 등 구조 및 피해복구지원업무를 담당한다.

#### 15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 벌칙이 강화되었다.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위반행위는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 오후 1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.) (기 p636, 토탈 p920)

- ①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.
- ② 적용대상 법규위반 행위에는 통행금지·제한위반, 주·정차위반, 속도위반, 신호·지시위반,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이 있다.
- ③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단속되는 경우, 범칙금 13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.



**17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**

- ① 해상시위·공중시위,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, 자동차·건설기계·농기계 등을 동원한 차량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다. (기 p787, 객 p911, 토탈 p379)
- ②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36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, 집회 금지통고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. (기 p790, 객 p904, 토탈 p370)
- ③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에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규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db 이하이다. (기 p795, 객 p910, 토탈 p376)
-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. 다만,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,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. (기 p796, 객 p898)

- 해설** ① 자동차, 건설기계, 농기계 등 차량을 동원한 자동차 시위와 해상이나 공중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 등으로 하는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회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 그러나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는 신고대상이다. 하지만 사실상 경찰행정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군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개최하여야 한다.
-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“24시간”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(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).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·시위가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·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(동법률 제8조 제1항 본문).
- ③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0db 이하이다(동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).
- ④ 동법률 제4조

**18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**

- 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. (기 p910, 객 p1020, 토탈 p445)
- ㉡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,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,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(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)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. (기 p916, 객 p1026, 토탈 p640)
- ㉢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회를 두고,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기 p913, 객 p1027, 토탈 p879)
- ㉣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(기 p918, 객 p1028, 토탈 p879)

※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[www.ppsg.co.kr](http://www.ppsg.co.kr) 에서 제공됩니다.



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(기 p743, 객 p853, 토탈 p744)

-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. (기 p744, 객 p854, 토탈 p344)
- ③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이 때,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. (기 p745, 객 p854)
- ④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(기 p744, 객 p854, 토탈 p841)

**해설** ▶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).

- ① 동법률 제11조 제1항, 제2항
- ② 동법률 제11조 제5항
- ④ 동법률 제11조 제3항, 제21조 제1항